

제38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윤덕민

소속: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주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한일 협력

일시: 2006년 05월 02일 (12 : 00 - 14 : 00)

*강연내용

얼마 전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대로라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것이며, 미국이 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북한에 가서 이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또한, 최근에 이대로라면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미국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중국이 급속도로 북한에 대해 진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째서 인가. 80년대 캠퍼스를 휩쓴 것이 종속론이었는데, 현재 전문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대로라면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이 되고 있는가. 역 발상을 통해 생각해보자.

우선,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인가? 7, 80년대에 한국이 일본의 종속지라고 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그 말대로라면 한국은 일본의 신식민주의를 통해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북한도 그러한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통제 경제시스템의 원초적인 문제로 인해 체제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대외의존도를 급속도로 높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도가 높다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 체제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는 얼마인가. 현재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20% 정도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체제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원유의 87%, 에너지의 70%, 교역의 40%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의 80%가 중국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북한의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다.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북한 전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근거 1. 정말 중국이 북한을 중화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기에 그 투자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상무역의 형태이다. 북한의 원자재는 비교적 풍부하지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고, 그것을 움직일 동력 문제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발전이 과도에 올라, 그 발전이 점점 내륙으로 올라가고 있다. 서부개발에 불이 붙으면서 원자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길을 내주는 등, 현재의 투자는 그 대신에 원자재를 대신 받는 등 보상무역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 종속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나진에는 3개의 부두가 있는데,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다. 그곳에는 2개의 부두를 더 설립 중인데, 그것을 중국이 건설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역시 경제적 종속관계를 만드는 데는 부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2. 투자할 때는 투자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북한은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이 없다가 작년해야 비로서 만들어졌다.

근거 3. 90년대 중국의 공개적인 입장은 한중 수교는 없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시 한중 수교로 대단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이후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근거 4.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련된 것에서 나름대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의 견제책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주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교류에는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대규모 경제 진출에는 왜 가만히 있는가. 2002년에 2차 핵 위기가 터졌을 때, 왜 한반도에 중국을 끌어들였을까. 부시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에 맡기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상당한 합의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 2기가 되면서 공화당 정통 현실주의자들이 대중 정책에서 힘을 얻으면서 최근에 달라진 것들 중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005년 8월에 미중 간에 시니어 회담이 열렸고, 2-3개월에 한번씩 전략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05년 3월에 라이스 장관이 처음 방중을 했을 때, 중국에 한반도 장래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한 것은 미중 관계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면서 부시 정부 초기에 대만 문제를 우선시 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이다.

중국도 후진타오 이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문제를 장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흡수한다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위안화를 절상했고, 중국에서 3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상당수를 미국이 수주를 따내도록 해주는 것으로 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네오콘과 국방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위협론, 월스트리트 중심의 중국기회론, 라이스와 졸릭이 주장하는 중국은 기회도 위협도 될 수 있다는 중국 책임론 등이 있다.

2005년 9월에 졸릭 장관의 연설은 대중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중국은 stakeholder(이해상관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적인 태도는 위험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장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고, 세계정치에 단순한 일원이 아니라, 이해상관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02년에 여기에 끌어들여, 최초 중국, 미국, 북한의 3자 회담에서 시작

해서 6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부시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것은 9/11 테러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1세기 첨단무기를 가지고 이라크를 초토화 시키지만, 국민의 마음을 잡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중동 정세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한반도에 대한 힘의 집중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이용해 상황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이익 관계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로 북한을 불러내지만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쓰러졌을 때 중국의 어려움을 인식한 것이다.

라이스와 졸릭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중국이 북한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을 이해하나, 북한의 핵 문제와 위폐문제 등의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하며 둘 다를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장래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은 바람직한 체제 개혁의 형태로, 중국식 개혁개방 형태를 제안한다. 즉,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로 가되 핵 문제만 해결하라는 것으로, 그 이후 중국은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미국도 중국의 역할에 대해 칭찬하였다.

그 이후, 마카오의 방크텔타아시아 사건에서 중국은 김정일 개인자금의 돈세탁을 발견, 애국법 314조에 의거해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였고, 북한 김정일의 비자금 담당 비서가 전격 체포되었다. 이후에 김정일이 등소평이 했던 남승강화(천안문 사태에 따른 중국 좌파의 반발과 압력이 일어나자, 등소평은 개혁개방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선전 등 발전지역을 돌아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식 개혁모델의 상징성을 가진다.)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이것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있다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우는 독일이 미국과 손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외교에서 동독과 서독이 가까워지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서방과 통합하여, EU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등과의 관계를 넓혀 간 것도 있다. 주변국들에게도 우리의 통일이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 일본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를 잘 읽고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급격한 사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데,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이에 관해서 중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있지만 미국이 이 사태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통일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국수주의적 접근으로,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는 것이다.